전남권 국립의대 설립 대학 추천 용역 속도낸다

‘설립방식선정委’ 구성…의대·병원 기본안 의견 수렴
동·서·중부 권역별 공청회 2회·도민 여론조사도 실시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 대학을 정부에 추천하기 위한 용역이 본격화된 가운데 수행 용역기관이 ‘설립방식선정위원회’ 구성 절차에 돌입했다.

전남도는 16일 “전남도 국립의대 신설 정부 추천 대학 선정 용역을 맡은 용역기관에서 첫 절차인 설립방식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 방식 기본안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설립 방식 선정과 미추천 대학·지역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설립방식선정위원회는 정부, 국책연구원, 학계, 보건의료 전문가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공정한 평가가 가능한 전문가 15명으로 이뤄지며 위원회 운영은 법률적 검토를 마친 운영 규정에 따른다.

대학과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먼저 목포대와 순천대 등 2개 대학과 목포시·순천시,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역 보건의료 현안과 국립의대·대학병원 설립 방향을 경청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학과 지역 등에 유선 연락, 공문 발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여러 차례 안내하고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설립방식선정위원회에서 설립 방식 기본안을 마련하면 두 차례의 도민 공청회, 전문가 의견 수렴, 여론조사 등을 통해 대학과 도민의 더 많은 의견을 듣고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설립 방식을 8월 말까지 선정할 방침이다.

이어 사전심사위원회(8월12일-9월20일), 평가심사위원회(9월23일-11월6일)를 거쳐 정부에 추천할 국립의대 설립 대학을 정할 계획이다.

강영구 전남도 인재육성교육국장은 “최근 서미화 국회의원과 면담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립의대 신설과 관련해 전남도가 공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정부의 요청에 맞춰 신속한 공모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학과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대책을 마련해 가장 합리적이고 도민이 바라는 대학과 대학병원을 설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국장은 “전남도는 공정한 관리자로서 용역 전 과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에 대한 어떠한 오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용역 전 과정에 신중을 기하겠다”며 “의견 수렴 절차가 시작된 만큼 2개 대학도 적극 참여해 의견을 적극 개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 추천 대학 선정 용역은 크게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설립방식선정위원회,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설립 방식 선정 및 미추천 대학·지역의 지원 대책 마련, 2단계는 사전심사위원회,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심사위원 선정, 3단계는 평가심사위원회, 정부 추천 대학 최종 선정 절차다. /김재정 기자

후반기 전남도의회 개원

전남도의회는 16일 초의실에서 후반기 개원식을 가졌다.

개원식에는 김태균 의장을 비롯한 61명의 의원과 김영록 전남지사,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김태균 의장은 “의원들의 정책역량 강화로 의정 실효성을 높이고 적절한 인사교류로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등 일하는 의회, 일할 맛 나는 의회의 구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체감도 높은 의정을 위해 도민 눈높이에 맞춰 집행부와 역량을 하나로 모으며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적인 전남 발전을 선도하겠다”며 “집행부에 대해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가감없는 감시와 견제로 도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정 기자

16일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열린 제12대 도의회 후반기 개원 행사에 참석한 김대중 도교육감(왼쪽부터), 김영록 전남지사, 김태균 의장, 이광일·이철 부의장이 축하 떡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전남도 제공〉

“道, 대안 제시하면 의대 신설 신속 검토”

조규홍 복지부장관, ‘전남권 의대 道공모’ 당위성 또 인정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남도의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설립 정부 추천 대학 선정 공모의 당위성을 재차 인정했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제416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서미화 국회의원의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관련 질의에 조 장관은 “전남도가 빨리 의견을 수렴해서 대안을 제시하면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지난 청문회에서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에 대해 전남도가 공모 절차를 통해 배정, 학교, 규모를 요청하면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025년 (의대 증원) 정원이 확정됐기 때문에 2026년도에 진행하지 않으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안된다. 2026년 (전남권) 의대 신설이 돼야 하는 것에 동의하느냐”고 질문했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달 26일에도 국회에 출석해 “전남도에서 빨리 대안을 제출해 주면 도와 협의해 빠르게 조치하도록 하겠다”며 전남도 공모에 힘을 실어준 바 있다.

특히 서 의원이 “장관께서 국무위원으로서, 또 복지부 장관으로서 책임감 있게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것에 대해 책임감 있게, 진정성 있게 진행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믿어도 되느냐”고 묻자, 조 장관은 “진정성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양시원 기자

“산사태 취약지 관리 철저…선제 대피를”

金지사, 호우피해 점검회의…위험지 현장점검·신속 대처 강조

김영록 전남지사는 16일 오전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계속 되는 비에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및 사전선제적 대피 등으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진도 의신면은 한 시간에 100㎜ 이상 폭우가 쏟아지는 국지적 호우로 주택 등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고흥과 해남, 완도 등에서 벼 277ha 침수 피해도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는 지난 15일 호우 대비 상황판단회의를 열어 대응 체계를 사전 점검하고 산사태·저지대 등 주민 사전 대피와 통제 등 사전 대응 활동에 주력했다. 산사태 취약지역에 거주한 49세대 82명이 사전 대피했으며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우려 지역 49개소도 사전 통제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30-100㎜의 비가 내리고 특히 화순, 보성, 순천 등 동부지역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사전 대응으로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농·수산, 도로 등 추가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피해 규모에 따라 복구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틀간 강하게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 및 급경사지, 축대 등 붕괴 위험이 있으니 예의주시하라”며 “상습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재해 위험지역은 현장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비상 근무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재난사태 선포권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토록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17일 시행되는 만큼 사전 대비·준비를 철저히 해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김재정 기자

전남도, 음식거리 2곳 선정

전남도가 2024년 남도음식거리로 ‘함평천지 맛거리’와 ‘진도서촌 간재미거리’를 선정했다. 남도음식거리 선정은 지역 특색을 살린 맛집과 전통음식을 중심으로 관광객에게 남도의 맛과 멋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다.

선정된 2개 군은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음식거리 상징물, 편의시설 등 관광객이 편히 이용하도록 2025년까지 개소당 10억원(도비 5억원·군비 5억원)을 들여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김재정 기자

‘천신만고’ 광주시의회 교문위원장 선출

명진 후보 재선거서 턱걸이 당선

광주시의회가 1·2차에 이은 재선거 끝에 교육문화위원장을 선출했다.

광주시의회는 16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교육문화위원장 재선거를 통해 단독 입후보한 명진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명진 의원은 이날 찬성 14표, 무효 6표, 기권 3표(전체 23명)를 얻어 턱걸이로 과반(12표)을 넘겼다.

명진 의원은 “개인적인 부족함으로 의회 전체가 거론돼 죄송하다”며 “하나 되고 소통함으로써 일 잘하고 신뢰받는 교문위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시의회는 지난 11일 임시회를 열고 4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

당시 안평환 행정자치위원장 후보가 찬성 12표, 최지현 환경복지위원장 후보·박필순 산업건설위원장 후보는 각각 찬성 14표를 얻어 과반을 넘기며 선출됐다. 하지만 명진 교문위원장 후보만 1·2차 투표 모두 부결돼 선출하지 못했다.

광주시의회는 상임위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운영위원장을 선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박선강 기자

CMYK